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 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시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한 명당 절감세액은 평균 등록금을 감안하면 120만원에 달한다.

내년 보유세도 다주택자 혜택 유지... 공정비율공시가격 동결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깎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금액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비율로 공제하기에 가진 부가 클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고, 부가 작을수록 혜택이 작은 공제다. 다주택자, 대재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제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로드맵을 폐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이 낮은 공시가격을 시세 쪽으로 당겨오는 작업이다.

자산 풀림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감세하면 자산 풀림이 더욱 커진다.

지난 정부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부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끌고 나가는 기간별 목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토지 보유자 등 부동산 부유층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목표치 74.7%에서 63.5%로 11.2%p,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6.8%p로 줄었다. 반면 아파트는 목표치 72.7%에서 69.0%로 3.7%p 줄었다.

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